

AI, 빅데이터 인력양성에 산·학·관 '맞손'

도·대학·기업·관련기관, AI 빅데이터 인력양성 간담회...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추진·연계 인력양성 방안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AI 빅데이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전북도 산·학·관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전북대 등 4개 대학과 SK E&S 등 4개 기업, 그리고 인력양성 혁신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빅데이터 인력양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 ICT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SK E&S의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사업현황 ▲대학별 ICT 인력양성 사업현황 ▲AI 빅데이터 인력양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전북도 ICT 전문인력은 총 7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해 1,300여명 양성을 목표로 미취업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산업체의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SK E&S는 새만금 투자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전북대 등 4개 대학과 SK E&S 등 4개 기업, 그리고 인력양성 혁신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빅데이터 인력양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 지원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창업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입주 예정기업

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SK데이터센터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추진하고 있는 만

큼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학별로는 전북대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원광대 SW중심대학, 전주대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군산대 5G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자원활용 최적화 기술 연구 등의 ICT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도내 기업들은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데이터 AI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데이터시대에 걸맞은 직무 전환 및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를 확보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배출해달라고 도와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별 AI 빅데이터 인력양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립했다"면서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전북의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탄소산업 육성, 청년에서 답 찾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청년 예비 창업자 간담회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22일 탄소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들과 예술가 등 청년 20여명과 함께 '탄소와 함께하는 청년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흥원 개원 1주년을 맞이해 탄소분야 청년 창업 및 창자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 진행에 있어 청년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격식을 없앤 '난상토론(爛相討論)'의 형태로 진행해 진흥원의 창업지원 실무자들과 청년 (예비)창업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소재 활용 예술가들을 비롯해 연료전지 촉매용 담지체, 탄소발열체, 인테리어 제품 등 분야별 창업기업 대표, 예비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청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 발제자로 나선 김기민 카본스튜디오 대표는 창업 과정에

서의 어려웠던점, 극복과정 등을 소개하며 친환경 미래산업에서의 탄소소재 전망과 해결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예술분야 대표자로 나선 장영애 작가는 "탄소섬유 특성상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탄소소재로 만든 공예품 등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탄소예술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창업자들은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일반 창업보다 시제품개발이나 인증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목소리를 높여 말했으며, 탄소분야에 특화된 창업 펀드 조성,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예산 배분 시 기술 창업 특성에 대한 고려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은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탄소소재 활용 아이디어 개발로 신산업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코로나19백신 노바백스·4차접종 시행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전북도가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노바백스 백신을 공급받아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1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기존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다.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2~8℃)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도내 일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1개소에서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i.kda.go.kr)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오는 3월 7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사

망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면역저하자(약 5.5만명),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2.7만명)를 대상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3차접종 완료 4

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경우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받게 된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대한교통학회 동북아 물류중심지 걸맞은 교통망 구축 협력키로

미래 교통정책 제안·교통분야신산업 유치·협력사업 발굴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종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2일 국내 교통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핵심 기반시설인 공항·항만·철도 건설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됐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1982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해 국내 교통산업 활성화를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토론펙팻폼을 제공하는 등 국가교통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향후,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교통정책 제안과 검토, 교통분야 신산업 유치,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계획이다.

안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교통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교통학회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도입 등 혁신기술과 사업모델 정착이 절실한 만큼, 교통관련 첨단기술 보급에 힘써 온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수변도시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1면에 이어... 부정수급 발생 제로화

첫째,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적보고서 검증 및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

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에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년 동안 공표한다.

셋째,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반영해 외부 감사를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고, 환수한 보조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이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군에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의 범위를 30% 기준으로 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지방보조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조사업자에게는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강력하게 제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